

# 유권자가 보여준 環境意識의 한계

## 지방의회의원 선거결과를 보고

**지난** 6월 실시된 광역의회의원선거결과를 보고 환경문제를 취재하는 환경기자들은 「아직도 우리국민들은 공해의 무서움과 환경보전의 귀중함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는 결론을 내리고 앞날의 공해문제를 걱정한 일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환경전문가들(이른바 환경후보)이 모두 떨어졌다. 이에 반해 환경파괴의 주역으로 비난받아온 건설업체대표를 비롯해 각종 기업체대표, 호텔사장 등 공해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면서 「경제가 발전해야 국가가 발전한다」는 단순논리를 편 개발론자들이 전체 당선자의 절반정도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당선자들 대부분은 여당인 民自黨의 공천을 받아 출마한 사람들이다.

여기서 짚고넘어가야할 부분은 환경보호론자들을 제치고 개발론자들이 「民意의 대변자」로 당선된 이면에는 환경인들도 크게 이바지했다는 사실이다.

5공화국때까지만해도 「공해」라는 단어조차 제대로 꺼낼 수 없을 정도로 공해는 반정부정착을 표현하는 구호처럼 인식돼왔다. 실제로 5공정부는 경제성장



皇甫永春  
(세계일보 사회부기자)

에 마이너스요인으로 작용하는 공해가 표출되지 못하도록 철저한 봉쇄조치를 취했다. 한예로 82년 미국 EPA(환경청)관계자가 82년 한국을 방문, 정부 고위관리와 환담하면서 『미리 공해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 국가의 이익이다』라며 조언을 하자 그 관리는 「나도 알고있지만 지금 정부의 방침이 경제성장우선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므로 경제성장에 역행하는 공해방지정책은 말을 꺼내지도 못할 분위기」라고 실토했다.

6공들어 민주화분위기에 편승 공해도 자연스럽게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때 일부 환경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환경정책수립에 「think Tank」 역할을 한 환경인

들은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라는 양비론을 정부에 주입시켰고 정부는 이를 십분 이용했다.

물론 이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환경학에서는 지극히 원론적인 말이다.

그러나 공해물질을 배출해 공해의 피해가 나타나도록 방치한 큰 책임은 대기업을 포함한 공해물질을 내보내는 배출업소와 이를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행정 지도를 펴지 못한 정부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해의 주역인 공해물질배출업소와 정부는 살짝 감춰버리고 「국민 모두가 공해의 가해자요 피해자」라며 비약시켰고, 공해의 메카니즘에 대해 잘 모르는 백성들은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물론 정부의 홍보용주장대로 엄청난 양의 생활하수와 가정쓰레기 가정난방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장본인은 국민이다.

그러면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는 경제만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거둬들이지 않는다. 그 세금으로 당연히 하

수처리시설을 건설하고 쓰레기 처리대책을 세워야하며 대기오염저감행정을 펴야한다. 이것은 사회복지·국민의 건강증진, 국토환경의 보전을 위해 서도 국가정책의 우선 순위에 올라야할 주요한 정책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러한 공해방지 정책을 효율적으로 펴지도 않고 은근히 그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스스로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생활을 해야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자구적노력으로만 한계가 있다. 아무리 생활오수배출량을 줄이고 쓰레기발생량을 적게해도 정부가 폐수처리장과 쓰레기처리 시설을 세우지 않는다면 공해발생은 막을 수 없다. 또 기업체들이 스스로 공해방지 시설을 설비·가동하지 않도록 한 책임의 상당부분도 정부에 있다. 그뿐인가 기업들이 공해방지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나 이를 단속하지 못하는 책임도 정부에 있다.

이렇듯 오늘날 환경문제를 일으킨 주역은 정부와 기업인데도 일부 환경인들이 제공해준 「국민모두가 환경오염의 피해자가해자」라는 아이디어로 정부는 마치 일반 국민들이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主客을 전도시킨 것이다.

공해에 찌든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는 참된 환경정책·행정을 추진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낸 세금이 어떻게 환경분



▲내년 국회의원선거에는 유권자들이 국회에 나가 잘못된 환경정책을 바로잡아가도록 환경후보에게 표를 던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  
환경관련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문가들이  
시·도의회·국회에  
나가 정부와  
기업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올바른 환경정책을  
펴야한다.

”  
야에 쓰여지고 있는가, 기업들은 소비자들로부터 벌어들인 돈으로 공해방지에 투자를 하는가, 조상대대로 물려이어져온 국토가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지않는가...

이러한 환경관련문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환경전문가들이 시·도의회·국회에 나가 정부와 기업인들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올바른 환경정책을 펴야한다.

그런데 환경전문가는 모두 멀어지고 대신 개발론자들이 대거 당선됐으니 앞으로 환경문제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끝났다. 내년 상반기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에는 유권자들이 국회에 나가 잘못된 환경정책을 고쳐 바로잡아가도록 환경후보에게 표를 던졌으면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국민 모두가 환경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아니다. 공해의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체요 피해자는 국민인 것이다」